

---

# 2020년 주요업무계획

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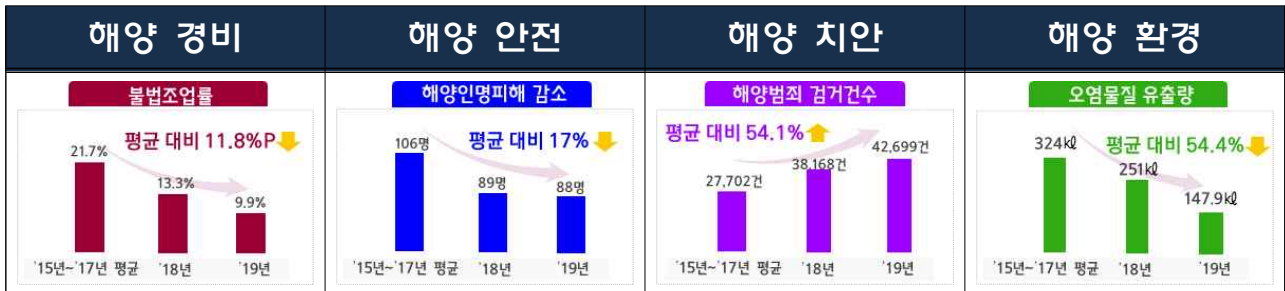


2020. 1.

해 양 경 찰 청

## 1 주요 성과

❖ 국민 체감형 성과창출을 위해 현장 전문성을 강화하고, 인프라를 확대했으며, '4대 주요 정책'을 적극 추진하여 주요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



## 1 [해양경비] 불법 외국어선 강력 단속 등 해양주권 및 권익 수호

- (해양주권 수호) 신종 불법조업에 대응하여 성어기 경비세력 증강·강력 단속\* 및 중국정부와 외교적 노력\*\*으로 조업질서 확립

\* 검문검색 1,161척(전년 대비 12% 증가), 퇴거·차단 7,804척(전년 대비 146% 증가)

\*\* 韓·中 해경국 국장급 회의, 어업문제협력회의, 어업공동위원회 등

- (해양권익 보호) 독도·이어도 전략적 경비활동 확대 및 해양정보 관리\*, 경비함정 역량 강화\*\* 등 경비체계 고도화 추진

\* 「해양경비지원 정보서비스」 구축 추진 및 4개 해양조사기관과 업무협약(7월)

\*\* 복수승조원제 확대(13척→28척), 함정표준일과표 도입, 자기주도형 교육·훈련 강화 등

## 2 [해양안전] 국민과 함께 안전한 바다 만들기 추진

- (구조역량 강화) 구조안전 인프라\* 확충 및 구조 즉응태세\*\* 확립

\* 구조(179명)·구급인력(15명), 연안구조정(56척), 구조거점파출소(13개소) 확충

\*\* 출동·도착시간 관리제 고도화 및 훈련 강화(1,506회)로 대응시간 88초 단축

- (해양안전 확산) 연안시설물 확충·위해개소 집중 단속\*과 함께 민간 협력 활성화\*\*로 대국민 해양안전문화 확산

\* 안전시설물(5,844개) 설치, 성수기 레저사업장 단속(198건), 음주운항 단속(115건)

\*\* 민간구조세력 통합(18개소, 3,760→4,389명), 민간연안순찰대 시범운영(19개소, 48명)

### ③ **[해양치안]** 해양에 특화된 수사역량 강화로 해양치안질서 확립

- (수사구조개혁) 경·검 수사권 조정 대비 수사 전문역량 확보\* 및 인권보장 수사환경 조성\*\* 등 해양수사 전문성·공정성 제고
  - \* 수사경과제 신설(1,160명), 수사연수소 신설(7월), 형사기동정 혁신(시범운영 8~10월)
  - \*\* 독립 조사실 구축(77개), 진술녹음제 시범 운영(9월), 수사개혁위원회 운영(4·11월, 12명)
- (수사 정상화) '해양 5대 부조리'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 및 해상 마약류\*·국제범죄\*\* 등 중대범죄 중심으로 특별 단속
  - \* 최대 규모 코카인(100kg) 밀반입, 수도권 일대 필로폰(108g) 등 판매·투약사범 검거
  - \*\* 밀항, 침단기술 유출, 외국인 인권보호 등 권역별·시기별 맞춤형 특별단속 시행

### ④ **[해양환경]** 해양종합 방제기관으로서 전문역량 제고

- (대외 협업) 유관기관\* 등과의 협력적·예방적 방제활동 적극 추진
  - \* 해양환경공단과 「유류이적 공동대응팀」 운영, 유류이적 등 총 84척, 26,280㎥ 기름 유출 차단 해양자율민간방제대 확대(76→108개소, 5개 연합회 창설) 및 민·관 합동훈련(79회) 실시
- (대응역량 강화) 기존 해양오염방제 임무와 더불어 화학사고 등 복합적 해양사고 대응을 위한 인프라\* 확보 및 전문성\*\* 제고
  - \* 유류방제정 배치(150톤급 4척) 및 다목적 방제정 예산확보(180억) 등
  - \*\* 화학사고 국제전문가 워크숍(7월), 전문기관 위탁교육(4회) 등

### ⑤ **[조직혁신]** 스마트 해양경찰로 도약하기 위한 추진동력 마련

- (혁신기반 마련) 법률·예산·조직·인력 등 조직 전반에 걸쳐 획기적 성과
  - \* 해양경찰법(8월) 및 선박교통관제법(12월) 제정, 예산(1조 5,293억) 및 소요정원(1,121명) 확보, 스마트추진단 신설(8월), 대국민 브랜드 정책(8월) 및 '미래 발전전략 2030' 수립(9월)
- (국제협력 강화) 新남방정책\*과 연계하여 해양경찰 대외역량\*\* 강화 및 해외 거점 마련을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확대\*\*\* 구축
  - \* 에콰도르 퇴역함정 양여 합의(5월) 및 중소조선업 활성화 아세안·인도 해경 수출상담회(11월)
  - \*\* 양자회의(중국·러시아 등 7개 국가) 및 다자회의(NPCGF·HACGAM·CGGS 등) 추진
  - \*\*\* 대륙별 거점 협력국가 확대를 위해 호주·나이지리아 해경과 DOI(의향서) 체결(10·11월)
- (국민소통 노력) 파급력 높은 방송 매체를 통한 해양안전 정보 제공 및 국민과의 다양한 소통의 장\*\* 마련으로 국민의 해양 관심도 향상
  - \*\* 매주 유튜브 방송 진행(구독자 263명 → 3,400명) 및 국민 문화행사 개최 등

## 2 보완 필요사항

### □ 관할해역 · 임무별 분절적 경비활동에 대한 입체적 관리 필요

- 일본 · 미국 등 주변국들은 해양활동에 대한 단순 감시체계에서 벗어나 해양 정보 등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추세

☞ **(개선 방향)** 해중·해상·해양 공간에서의 완벽한 해양정보·해양상황 대응 등을 위한 미래형 해양안전관리망 구축 추진

### □ 중장기 계획인 「미래비전 2030」을 단기계획과 연동 필요

- 장기계획 지속적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정책실행력 확보 필요

☞ **(개선 방향)** 미래 발전전략 2030(10년 단위)과 함께 전략 실행계획(5년 단위)을 마련, 매년 주요업무계획(1년 단위)과 연동시켜 강력한 실행력 확보

### □ 법적 인프라 및 인적관리시스템 보강 필요

- 다양한 임무에 비해 소관 법률이 부족(단독소관 6건)하고,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인 인적관리 · 교육훈련체계가 다소 미흡

☞ **(개선 방향)** 전문 인재 선발·양성을 위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(S-HRM) 체계 구축 및 기능별 임무 수행에 필요한 후속 법률 제정 등 추진

### □ 해양안전 및 해양환경보호 위한 정책홍보 · 국민소통 강화 필요

- 과거에 비해 보도자료 배포 · 유튜브 방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양 안전 정보 등을 알리고 있으나 국민적 관심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

☞ **(개선 방향)** 기존 보도자료 중심 홍보에서 탈피, 해양안전과 해양환경보존을 알리기 위한 기획홍보 및 디지털을 활용한 쌍방향 소통 활성화

### 1 < 대외 > 국정운영, 미래기술, 국제 해양환경에 걸쳐 변화 촉발

- 정부 출범 4년차에 따라 강력한 성과 창출이 요구되는 시점이며, 강한 안보 및 안전,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에 집중 예상
  - '20년 국정운영 방향은 ①혁신 ②포용 ③공정 ④평화 경제를 통해 '함께 잘사는 나라'를 만드는 것으로 설정(예산안 국회 시정연설)
- ※ 「혁신적 포용국가」를 위한 4가지 : ①더 활력 있는 경제를 위한 '혁신' ②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'포용' ③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'공정' ④더 밝은 미래를 위한 '평화'

#### < 시정연설 키워드 >

- ▶ '4차 산업혁명' 시대 혁신역량이 곧 국가경쟁력의 핵심 (D데이터.N네트워크.A인공지능)
  - ▶ 당당한 주권국가 되기 위해선 '강한 안보'능력을 갖추어야 함
  - ▶ 공공외교와 ODA 예산을 대폭 늘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, '지속가능한 성장' 지원
  - ▶ '민생'과 '안전'에 대한 국민의 요구 증가로 '사회안전망'을 더욱 촘촘하게 보강
- 또한, '20년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(4월)와 美 대통령 선거(11월)가 예정되어 있어 대·내외 전략에도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
- 인공지능,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융·복합되며 폭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, 해양경찰 업무에서도 패러다임의 변화가 예상
  - 해양경찰도 6대 미래핵심기술 개발 추진을 본격화한 만큼 변화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임무에 특화된 기술 개발 집중 필요
- 각국은 해양주권 확대를 위해 자국의 해양력을 극대화시키는 추세로, 해양 선진국의 경우 '해양상황파악' 역량 강화\*를 주요 정책기조로 천명
  - 일본은 정부 및 해양 관련기관이 보유 중인 200여종의 해양정보를 해상보안청으로 일원화하여 '해양상황표시시스템'을 구축('19.4月) 하고, 해양감시를 위한 정보수집 - 정보집약 - 국제협력 등을 전략적 추진

## 2 <대내> 해양경찰법 및 미래비전 본격 추진, 혁신적 발전 가속화

- 「해양경찰법」 시행(2.21.)으로 해양경찰위원회가 주요 정책·제도를 심의·의결함에 따라 민주적 통제 및 정책 추진에 일관성 확보 가능
- 또한, '19년 수립한 '미래 발전전략 2030'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첫 해\*로서, 해양경찰의 혁신적인 발전을 가속화시켜야 하는 시기
  - \* 미래 발전전략 - 전략 실행계획 - 주요업무계획을 연동 수립하여 실행력 확보
- 역대 최대 규모의 주요 사업비(6,189억), R&D 투자(24개 과제, 200억) 및 정책 연구용역(8억) 등을 통해 스마트 해양경찰 추진에 탄력
- 또한, 미래 전략적 조직으로 신설한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과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벤처형 조직 신설 등 강력한 혁신 동력화 추진

### '20년 예산 편성 주안점

#### 1 해양 안전 인프라 확충으로 안전한 바다 구현

- 원거리·악천후에도 다수 인명구조가 가능한 대형헬기 도입을 통해 항공 중심의 구조 체계 구축 등 구조·안전 기반 확충
- 쏘 파출소(95개)를 구조형 파출소로 개선하고, 현장요원 긴급구조 과정 교육·훈련으로 구조 대응시간 단축 등 국가해양구조역량 강화
- 청정 제주해역에 해상교통관제서비스(VTS)를 확대하여 선박 충돌·좌초 등 해양사고 예방활동 강화

#### 2 전략적 경비활동으로 주권수호 및 해양권익 확대

- 동해 접경해역 등 경비수요 확대에 따라 전용함정 배치 및 노후 함정·고속단정 대체 건조를 통해 해양 경비력 최고도 유지
- 현장 중심의 업무기반 조성을 위한 함정 정비비 현실화와 함정 부족에 따른 복수 승조원제 확대 등을 통해 함정 가동률 향상
- 다변화 되는 해상 여건에 대비 인공위성 기반 선박 모니터링, 구조요원 웨어러블 슈트 등 미래에 쓰일 첨단 기술(R&D) 개발

#### 3 민간협력제도 강화 등 국민 맞춤형 해양 안전관리

- 민간해양구조대원들에 대한 복장·보험 제공 및 수색구조 참여 민간인에 대한 수당 지급 등 민간구조협력 체계 강화
- 선령 초과된 노후 유·도선에 대한 용자 금리지원을 통해 선박 현대화 유도 등 바다 이용객 안전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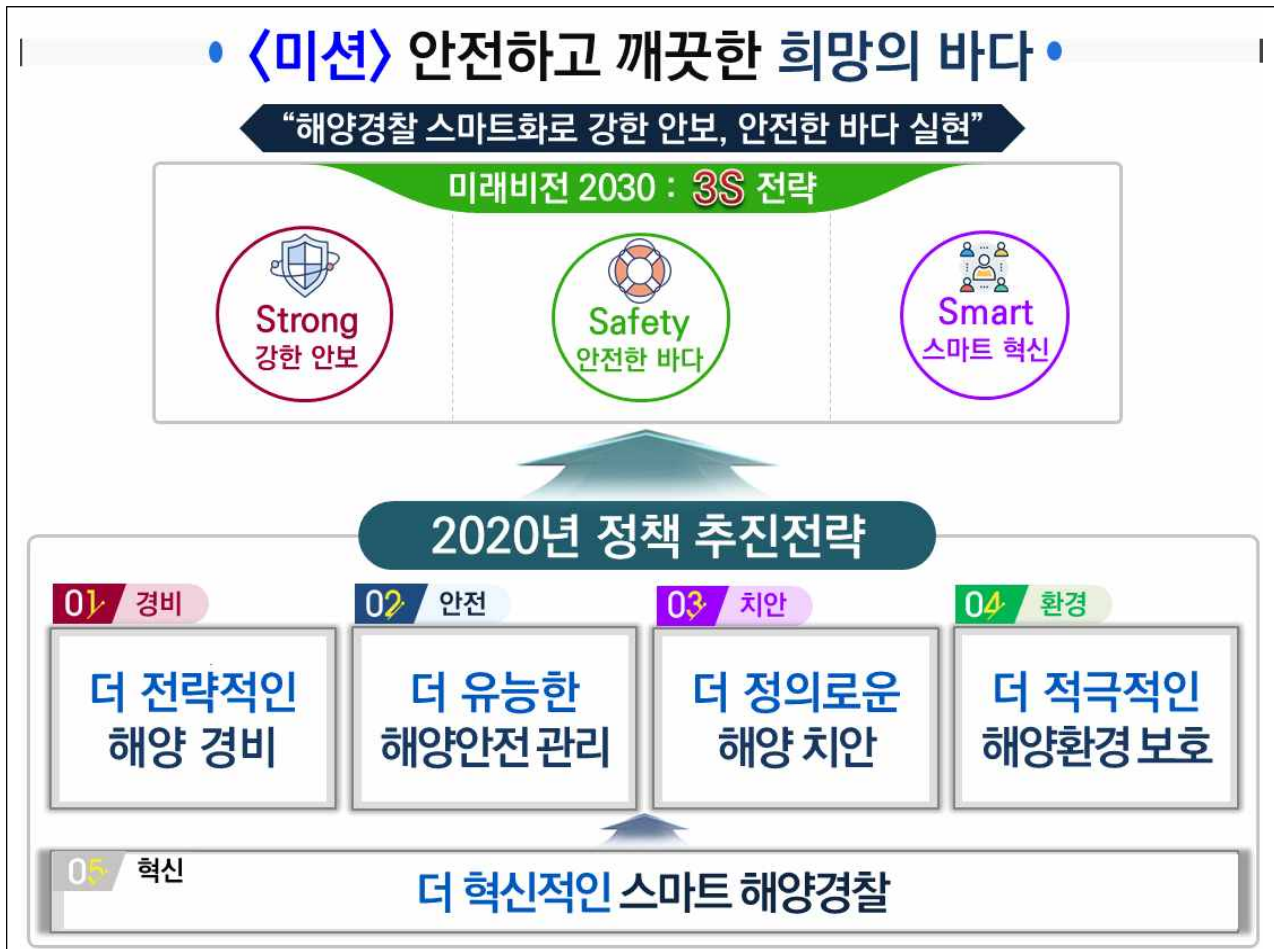
## 1 미래비전 추진 체계

- 장기·중장기·단기계획 연동을 통해 미래비전 실행력 확보
  - 장기계획인 '미래 발전전략 2030'과 5년 단위 '전략 실행계획', '20년 주요업무계획'을 중심축으로 각종 계획과 연동·추진
  - 아울러, 현장은 본청의 정책방향을 충실히 이행하고, 본청은 현장에서 적극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기적 정책관리 강화





## 2 '20년 정책추진 전략



- 재출범 이후 조직 운영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고, 「해양경찰법」 제정, '미래 발전전략' 수립 및 예산·인력 확충 등 조직기반 구축
  - '20년에는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해양경찰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국민 체감 성과 창출이 필요한 시점
- 5대 기본 전략목표로 ①경비 ②안전 ③치안 ④환경 전략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⑤혁신 전략을 설정하고,
  - 주요 대표 정책, 목표 중심 성과관리제도 및 6大 미래기술 개발 등 '19년 역점정책을 지속 추진



# IV

## 주요 정책과제

5대 분야	주요 정책과제 (24개)	소관 기능
<b>1</b> <b>경 비</b> (레드오션)	<b>전략 1 더 전략적인 해양 경비</b>	
	1. 전략적 경비활동으로 해양권익 확대	경 비
	2. 상황관리체계 전문화	상 황
	3. 전략적 장비 도입 및 인프라 조성	장비기술
	4. 경비안전 통합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체계 개선	정보통신
<b>2</b> <b>안 전</b> (블루오션)	<b>전략 2 더 유능한 해양안전 관리</b>	
	5. 국민이 더 안심하는 해양안전관리체계 구축	해양안전
	6. 해양 재난관리 역량 및 협력체계 고도화	수색구조
	7. 안전한 수상레저 환경 조성	수상레저
	8. 해상교통관제(VTS) 체계 고도화	교통관제
<b>3</b> <b>치 안</b> (퍼플오션)	<b>전략 3 더 정의로운 해양 치안</b>	
	9. 해양에 특화된 전문수사체계 구축	수 사
	10. 국민 중심의 형사활동 방향 정립	형 사
	11. 글로벌 외사활동, 국제성 범죄 효과적 대응	외 사
	12. 스마트 정보·보안 역량 강화	정 보
<b>4</b> <b>환 경</b> (그린오션)	<b>전략 4 더 적극적인 해양환경 보호</b>	
	13. 해양 환경재난 대응 역량 강화	방제기획
	14. 대형 해양오염사고 대비·대응체계 고도화	기동방제
	15. 국민이 체감하는 해양환경 보호활동 전개	오염예방
<b>5</b> <b>혁 신</b> (화이트오션)	<b>전략 5 더 혁신적인 스마트 해양경찰</b>	
	16. 국민 삶을 향상시키는 혁신성과 창출	혁신기획재정
	17. 지속 성장이 가능한 미래형 조직운영 기틀 확립	행정법무
	18. 미래변화에 걸맞은 인사운영체계 개선	인 사
	19.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체계 고도화	교 육
	20.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해양경찰 스마트화 실현	스마트추진단
	21.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리더로 도약	국제협력
	22. 해양안전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대국민 홍보	대변인
	23. 근본적 변화를 통한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도약	감 사
	24. 출근길이 즐겁고 자긍심 넘치는 일터환경 조성	운영지원

경비	전략 1 더 전략적인 해양 경비	
	1. 전략적 경비활동으로 해양권익 확대	경비

## ①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전략적 경비활동 전개

### ① 불법조업 외국어선 전략적 대응

- 해역별 불법유형에 따라 효율적 단속을 위해 수법·시기 등을 전략적으로 분석하여 테마형 외국어선 대응 계획 수립 및 집중 단속

- ▶ (NLL 해역) 고속 선외기 보트, 자모선 형태 변칙조업 등 신종 수법 대응전술 개발
- ▶ (동해 북상어선) 유관기관 협력, 긴급피난 시 감시철저로 불법행위 사전 차단
- ▶ (서해 집단침범) 물리적 저항에 대해 기동전단 운영 등 우세한 대응세력 확보
- ▶ (EZZ 허가어선) 경미위반 경고처분, 준법어선 홍보물품 지급 등 합법·불법분리 대응

- 한·중 해경간 공동순시 내실화 등 양국 해경기관 간 직접 공조 체계 강화로 서해 불법어선에 대한 중국 해경에 의한 예방 활동 확대

※ 한·중 해상치안기관장 회의, 유관기관(해수부·외교부) 주관 어업문제협력회의·어업공동위원회 등 회의 시 조업질서 확립 촉구

- 단속 및 무기사용 절차에 대한 숙지, 단정 및 장비활용 능력 배양과 단속전용 함정 건조 및 장비 개발 등 인적·물적 단속 역량 강화

- ▶ (인적역량) 맞춤형 해상특수기동대 교육·훈련, 단정운용 역량평가대회 개최 등
- ▶ (물적역량) 직접 계류 가능 전용함, 등선방해물 제거장비 및 다각도 소화포 등 개발

### ② 해양영토 관리 및 권익확보 극대화

- 독도·이어도 등 주요해역 우발사태 대응능력 강화, 대화된 해역 순찰 등 경계 미확정 해역에 대해 전략기동 등을 통해 해양관할권 강화

- 해양조사기관과의 협업 강화 및 해양정보 공유에 대한 법적 근거\* 마련

\* 해양경비법 개정 추진, 해양수산부 및 조사기관과 협업회의로 공감대 확대

- 해·공 입체적 경비활동을 위해 항공기 운용능력 및 치안수요 고려  
해역별 정밀 순찰을 위한 해상순찰 방법 개선(순찰코스 확대)
- 북태평양 해상치안기관(NPCGF) 회원국으로서 치안수요 등을 감안한  
공해상 불법어업 단속 참여 검토 등 글로벌 경비합정 순찰 강화

## ② 경비체계 고도화 및 자기주도 합정 역량 강화

### ① 해양경비체계 고도화 및 인프라 마련

- 해양경찰의 전 해역에 대한 실시간 상황인식과 효율적 통제 기반을  
마련하기 위해 전략적 해양경비 체계 구축 추진
- 해양정보 수집·분석, 해양과학조사 활동 사전 정보 확보 등 미래  
해양경비활동 법제화를 위한 「해양경비법」 개정 추진
- 복수승조원제 확대 등으로 탄력 경비체계를 마련하고, 경비구역에  
대한 치안수요 분석을 통해 구역·합정 편제 개편 검토

※ 지방청별 경비구역 치안수요 분석, 시기별 경비함 탄력적 배치·검토

### ② 해양경비정보 분석 고도화

- 외부 전문가 자문 및 유관기관 해양정보 협력, 주변국 해양정보  
수집 및 활용 등에 관한 R&D를 실시, 효율적 해양경비 토대 마련
- 기능별 경비정보를 소속서 관할 상황도 기반 단일페이지에 통합  
구현하고, 유관기관과 활용 가능한 '공동활용시스템' 구축

### ③ 성과 지향적 합정문화로 개선

- 실시간 합정 실적관리, 정기적인 합정 성과 분석, 관련 부서협의  
합정장 보직인사 시 성과평가를 반영하는 환류체계 마련
- 합정 성과와 함·정장 인사·보직을 연계하여 함·정장 역량 전문화
- 기본에 충실한 성과경연 대회 및 동료 교관요원 등에 의한 OJT  
활성화 등 자기주도 역량 공유 문화 정착

---

### ③ 해양 위기관리 역량 강화

---

#### ① 현장 중심 비상대비·위기관리 강화

- 해양재난·테러 등 포괄적 안보에 중점을 둔 을지태극연습 실시 및 국가방위 요소간 실질적인 협력 강화로 통합방위태세 확립
- 우리어선 월선·피랍 예방 및 北 선박 NLL 월선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 정보공유 및 효율적 경비세력 운용으로 접경 해역 안전관리 강화

#### ② 해양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후속 실행방안 준비

- 9.19군사합의서 해양수산분야 후속 합의에 대비,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청 실행방안을 내실있게 준비
- 해양경계 임무전환 대비 軍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작전개념을 정립하고 첨단기술 중심의 효율적인 해안경계체계\* 구축방안 마련

\* 연안안전관리 및 시를 활용한 무인감시 등 중장기적 장비·시스템 구축과 연계 추진

---

### ④ 예방중심의 해양테러 대응역량 고도화

---

#### ① 해양테러 통합 예방체계 구축 및 현장중심 대응역량 고도화

- 해양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방청 중심 통합 예방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 합동 대응체계 Zero Base 검토
  - \* 유관기관 합동 대상시설 일제점검, 해양테러 예방·대응관련 「매뉴얼」 정비 등
- 해역별 특성화된 위기상황을 분석을 토대로 한 교육·훈련 강화,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전 현장중심의 해양테러 대응체계 고도화
  - \* 「해역별 해양테러 및 고위험 해양상황 특성과 대응방안」 자료집 발간

#### ② 4차 산업혁명 시대, 해양테러 주관기관으로서 위상 제고

- 드론, 자율운항선박 등 첨단기술 이용한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 안티드론 시스템 개발 및 국내·외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강화
  - \* 국토부·해수부 등 「ICT 자율선박 개발 다부처사업」 참여 및 R/D 사업 추진
- 해양테러 등 복합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대응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위기 협상팀 정예화 및 해양 위기상황 협상 매뉴얼 제작

경 비	전략 1 더 전략적인 해양 경비	
	2. 상황관리체계 전문화	상 황

## 1 전문적이고 유능한 상황요원 양성

### 1 본청 주관 상황대응훈련 개선

- 해역별 안보·주권·치안·오염 등 특성화 훈련 비율 확대 및 최근 사고사례를 훈련에 반영하는 등 실전적 상황대응훈련 실시

- ▶ (훈련내용) 본청 자체 메시지 작성 → 과거 사고사례를 훈련메시지로 작성
- ▶ (훈련방법) 통신망 활용 도상훈련 → 실제기동훈련
- ▶ (훈련참여) 일부 상황요원 주도적 집행 → 상황담당과장 훈련참여 확대

-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한 상황보고서 1보 전파 기준시간(5분) 지속 관리

### 2 상황요원 직무능력평가 및 전문교육 강화

- 직무능력평가의 필기시험, 상황대응훈련, 실기시험을 개선하여 수용도를 제고하고, 평가기준 미달자에 대해 집중교육 실시 후 재평가

- ▶ (필기시험) 문제은행식 출제 → 출제문제 다양화 및 문제난이도 조정
- ▶ (상황훈련) 개인별 주요임무 이행여부 → 개인별 임무 상세화, 상황처리 적합성
- ▶ (실기시험) 전체 상황시스템 운용법 개괄적 평가 → 개인별 전담 상황시스템 확대

- 지방청 주관 지방교육센터 상황교육 개설 및 지방청·관할 경찰서 상황요원, 함정·파출소 등 현장요원 대상 상황 전문교육 실시

### 3 119·112와 긴급신고 공동대응 역량 제고

- 지방청 신규 긴급신고 접수요원에 대해 상황유형별 응대방법 및 위기대응 심리교육 등 집중 교육훈련 실시 및 인력풀 지속 확보
- 행안부 주관 해경 ↔ 소방·경찰 긴급신고 공동대응 훈련 실시

---

## ② 상황처리 평가·환류 강화

---

### ① 상황처리 디브리핑 정례화

- 본청 종합상황실장 주관 지방청별 상황처리 디브리핑 실시
  - ▶ (본 청) 상황처리 관련 지휘부 전달사항 및 상황처리 착안사항 전달
  - ▶ (지방청) 주간 주요 상황처리 분석 결과 및 시사점 등 공유
- 지방청별 분석한 녹취록 중 사고유형별 우수 녹취록을 선정하여 접수요원 교육 자료 활용 및 우수사례는 책자 발간

### ② 상황처리 우수사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

- 상황처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및 우수 신고 접수요원 선발(하반기)

---

## ③ 상황관리체계 및 시스템 고도화

---

### ① 지방관서 상황관리 조직체계 강화

- 지방청 중심 상황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총경급 종합상황실장 배치 및 지방청·경찰서 상황팀(실)장을 경정·경감급으로 격상 추진
- 4교대 근무체계 확립을 위한 인력 확보 추진

### ② 대응세력 지시시간 관리제 도입

- 상황발생 시 종합상황실에서 F/R(First Responder : 초동대응팀)에 신속히 현장 이동지시 했는지에 대한 상황 대응결과 분석·관리
  - ※ 신고접수부터 이동지시까지의 소요시간으로 사고위치파악 시간 최소화 집중 관리

### ③ 상황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

- 상황 유형에 따라 상황요원 개인별 조치사항들이 통합상황관리 시스템 화면에 전시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추진
- 대북관련 상황 시 작성·전파 중인 상황보고서에 대한 대내·외 보안 강화를 위해 비밀로 등재·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추진
  - ※ 대북관련 상황보고서 전파 대상기관과 시스템 구축·활용 협의 및 ISP(시스템 설계·소요예산 산정) 용역, 기재부 예산 확보 추진



경 비	전략 1 더 전략적인 해양 경비	
	3. 전략적 장비 도입 및 인프라 조성	장비기술

## ①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장비도입기반 구축

### ① 미래 발전전략 연계, 장비증강 목표기획서 전면 개정

- 「해양경찰법」 제정 및 '미래 발전전략 2030' 수립에 따라, 해양 치안환경 및 장비증강 정책변화를 반영한 전략적 장비도입계획 수립
- 체계적 논리 개발 및 대내외 공신력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 연구 추진  
※ (1분기) 연구용역 → (2분기) 선행 연구 → (3~4분기) 장비증강목표기획서 수립

### ② 「해양경찰 장비도입·관리법」 제정 추진

- 지난해 연구용역 결과('19.9.)를 바탕으로 해양환경 및 임무특성을 고려한 「장비도입·관리법」 제정 추진

## ② 차세대 함정 개발 및 핵심장비 적극 도입

### ① 임무환경 변화에 따른 첨단 장비 도입

- 신형 3000톤급 경비함(대화퇴 전담)에 첨단화된 무인기 플랫폼, 해양 정보수집기능 및 대빙기능을 확보하고, 친환경 방제정 개발 추진
- 신규·노후대체 함정(12척) 적기 도입 및 대형헬기(1대) 조기 계약

### ② 2020 국제 해양·안전 대전 개최

- 미래 발전전략 2030과 연계된 첨단 장비를 적극 유치하여 최신 장비·기술 개발과 정보 획득·공유 추진(6.24.~26. 송도 컨벤시아)

---

### ③ 대·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

---

#### ① 민·관 싱크탱크 운영

- 국내·외 조선 기술환경 변화, 사업 확대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민·관 전문가로 구성된 '함정기술 발전 협의회' 발족
  - ※ 첨단 함정 발전방향 및艦 성능·근무환경 개선 등 현안과제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
- 한시적인 장비도입분야 연구 한계에서 탈피, 함정건조 주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위해 '차세대 함정 발전 컨퍼런스' 개최
- 전국 대학생 대상 '해양경찰 함정 설계 공모전' 개최를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, 우리청 정책공유 및 홍보효과 제고
  - ※ (대상) 전국 32개 대학 조선공학과 학생 / (주제) 친환경 방제정 개념설계

#### ② 新 남방정책 일환 퇴역함정 무상양여 방안 마련

- 「해양경비법」 개정을 통해 퇴역함정 무상양여 근거 마련 및 퇴역 후 양여 시까지 최적의 장비상태 유지할 수 있도록 자체 규정 마련

---

### ④ 세계 일류 종합정비창 신축

---

#### ① 산·학·관 협력 다목적 종합정비창 추진

- 서부정비창은 「경비함정을 정비한다」는 개념에서 탈피,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이슈에 대비하는 「정비+교육+보급+민·관 상생형」 비전 제시
  - ▶ (정비) 민·관 협력적 분업체계 확립, 외부 정비업체 전문 인력을 항시 배치 (용역계약), 함정 고장수리뿐 아니라 주기적으로 함정 상태를 진단하여 정비
  - ▶ (교육) 현장에서 문제해결, 정비기술·지식 등 전문성을 갖춘 고급 정비인력 양성
  - ▶ (보급) 4차 산업혁명(스마트 팩토리 등) 첨단기술과 서비스 디자인기법 도입
  - ▶ (협력) 조선소, 조선기자재·부품업체, 조선분야 교육 및 연구기관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함정정비 분업·전문화, 국가R&D 추진
- 미래 함정수리 수요변화 등을 감안, 최적의 시설·장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반영 추진('24년 완공)

---

## 5 항공 임무역량 강화

---

### ① 항공 수색구조 역량 강화

- 야간임무 가능한 중형헬기 전력화(2대/4월중)에 따른 수색구조 역량 강화
  - ※ 중형헬기(흰수리) 강릉·제주에 배치('19. 12월), 제작사 교육 및 적응훈련 중
- 전천후 임무 헬기(팬더) 재배치로 항공대 야간 임무능력 고양
  - ※ 야간임무가 제한되는 여수항공대에 팬더 이동 배치(제주 → 여수)

### ② 항공기 가동율 향상을 위한 정비관리 철저

- 「고정의정비대 신설」 추진을 통한 자체정비 능력 향상
  - ※ 고정의 자체정비(30%) → 회전의 자체정비(60%) 수준으로 상향
- 항공기 제작사 정례회의 실시 및 軍 등 국가기관 간 상호 지원 강화
  - ※ CN-235 제작사 정례회의 2회, 해경-육군 '흰수리' 정비지원 MOU 체결 추진

---

## 6 항공 인프라 확보 및 항공안전 문화 확산

---

### ① 항공대별 격납고 신축·증축 등 항공 발전 인프라 마련

- (강릉) 격납고 부지 산림청 반환으로 신규 격납고 신축부지 확보
  - ※ '22년 대형헬기(S-92) 1대 도입 및 강릉에 배치 예정으로 대형 격납고 필요
- (인천) 회전의 격납고 수용 한계에 따른 별도 정비대 격납고 신설
  - ※ S-92 등 대형헬기 도입으로 대형헬기 정비 입고 시 다른 헬기 동시 입고 불가

### ② 항공안전 문화 확산

- 자기주도형 근무를 위해 소 항공대 항공안전관리자를 전문가로 양성
  - ※ 양성인원 22명(11개소 항공대) / 소요기간 2년 / 항공안전·운항관리 16개 과정
- 소통·팀워크 향상을 위한 항공안전 문화증진 프로그램 추진
  - ※ 외래 강사 강의, 명상수업 등 전국 항공대 순회 시행

## ① 위성통신망 성능 개선 종합 대책

### ① 자체 위성통신망 확보 및 대역폭 확대

- 해양 치안 및 수색구조 등 다양한 업무 수행을 위한 우리청 자체 위성통신용 탑재체 확보, 함정 영상전송 끊김 및 시스템 속도 저하 개선을 위한 위성대역폭 확대

\*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및 예산 확보 : '20. 1 ~ 12월, 300MHz, 485억원 / '21 ~ '27년(7년간)

\*\* 위성대역폭 증설 및 영상전송 개선 : '20. 1 ~ 6월, 40MHz, 25.5억원

## ② 첨단기술을 통해 정보통신체계 개선

### ① 우리청 데이터 통합 저장소 구축

- 해경 고유 데이터의 효과적 관리·통제를 위하여 '표준관리 시스템' 및 데이터 생애주기에 따른 '데이터 통합관리 체계' 도입 추진

※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, 상황 신속대응, 현장 행정업무 경감, 현장 집행력 강화

-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구축을 통해 데이터 품질 ①분석→ ②진단→ ③평가 → ④개선업무 자동화로 고품질 데이터 공급 가능

### ② ICT 신기술 적용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강화

- 모바일기기, 무인기 등 ICT 신기술이 적용 된 정보시스템의 현장 보급과 확산에 따른 보안관리 및 취약점 진단 방안 마련

▶ 모바일·무인기 관련 보안점검 항목 및 가이드라인 하달(10월)

▶ 신기술 적용 정보통신시스템 도입 前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성 검토 실시

## ① 협업 및 첨단기술을 통한 연안안전관리 고도화

### 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연안안전관리체계 마련

- 지역주민·단체 등 지역공동체가 참여하는 '국민참여 위험성 조사'(연 1회) 실시 및 위험구역 집중 관리를 위한 '위험구역 책임 관리제\*' 시행

\* 상반기 위험성 조사를 통해 1년간 집중관리하는 '1년 책임 관리제' 도입

- ▶ 위험구역에 다목적CCTV, 고보조명, 사고예보시스템 등 확대 설치 권고
- ▶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은 위험구역에 국가지점번호표지판 설치 권고

### ② 연안해역 위험도 평가·예측체계 개발 추진

-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 연안 해역 위험정보\* 제공을 위한 지도 형식의 '연안안전지수' 개발 추진(R&D, '20~'23, 총 44억)

\* 각종 통계, 실시간 데이터 등 빅데이터와 연계한 위험구역 실시간 예측

## ②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안전문화 확산

### ① 연안체험활동 관리체계 구축

- 연안체험활동 신고에 대한 현실적 기준 마련, 통합 교육과정 신설 등을 위해 시행규칙 개정 및 안전한 체험활동을 위한 단속·홍보 강화

### ② 대국민 해양안전 의식 강화

- 대국민 해양안전 공감대 확산을 위한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 추진

\* '구명조끼 입기 실천운동' 캠페인, 연안안전 콘텐츠 대국민 공모전 개최 등

- 연안안전교육을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생애주기 맞춤형 교육으로 체계화하고, 장애인·외국인 등 안전 취약계층 대상 교육\* 확대

\* 청각 장애인용 수화 영상, 외국인 선원용 외국어 자막 등 별도 교육자료 제작

---

### ③ 파출소·출장소 임무 및 역할 강화

---

#### ① 파출소 미래형 표준모델 추진 및 대응역량 강화

- 파출소 장비·시설확충\* 및 해역특성에 맞는 연안구조정 모델 개발 추진
  - \* 신형 연안구조정 추가도입(8척) 및 파출소 전용 계류시설 추가 설치(6개소)
- **全 파출소의 구조형 전환을 위해 일반 파출소(70개소) 긴급구조 과정 운영 및 구조거점 파출소(25개소) 잠수지원 요원 양성**

#### ② 출입항 신고기관 재정립 및 업무 고도화

- 「어선안전조업법」(8.28 시행)에서 위임된 사항 및 현 출입항 업무 실태를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「선박통제규정(훈령)」 재정비
- 장기간 운영중인 순찰형 출장소와 어선자동출입항(V-Pass)으로 역할 감소된 대행신고소는 필요성 재검토를 통해 효율적 운영체계 마련
- V-Pass시스템 출입항 방법 개선 및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확대
  - \* 유관기관 데이터 연계를 통해 V-Pass 승선원 중복 현상 등 미비점 보완 등

---

### ④ 국민 안심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추진

---

#### ①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체계 고도화

- 다중이용선박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5대 안전위반행위 집중 단속
  - \* (5대 위반행위) 정원초과, 영업구역 위반, 구명조끼 미착용, 출입항 미신고, 승객신분 미확인
- 다중이용선박 관계관 협업 강화를 위해 합동워크숍 및 합동점검 실시
  - \* (협업기관) 중앙부처(행안부, 해수부), 지자체, 선박검사기관, 유도선 협회 등

#### ② 다중이용선박 안전운항 기반 구축

- 선박 현대화를 위한 유·도선 이차보전 사업을 실시하고,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 확보를 위한 정보화시스템 및 모바일 앱 등 구축

- ▶ (유·도선) 승객 신분확인 등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(행안부 협업)
- ▶ (낚싯배) 기존 수기로 작성하던 승선자 명부를 앱을 통해 신고(해수부 협업)



## 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수색구조체계 개선

### ① 해양수색구조 기술 선진화

- 신속·안전한 수색구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AUV·수중 CCTV, 드론을 확충하고, 유인잠수정, 고성능 ROV, USV(무인선박) 등 도입 검토
  - ▶ 수중수색 통합관제 시스템, ICT 통신시스템, 웨어러블 등 스마트 R&D사업 추진
  - ▶ 구조함 건조를 위한 “도입 필요성 및 운용개념 정립 연구용역” 추진
  - ▶ 첨단장비 도입·운영, 교육·훈련 계획 수립 등을 위해 ‘특수구조구급계’ 신설
- ROV·AUV·드론 등 첨단장비 운용능력 강화를 위해 위탁교육, 교육원 교육과정을 개설하고, 同 장비들을 동원한 수난대비기본훈련 실시
- 지능형(AD) 수색구조 지원 시스템\* 구축을 위한 R&D 사업 추진
  - \* 수색계획 수립, 사고 예측, 각종 정보 제공 등 수색구조 및 해양안전 활동 지원

## ② 해양재난 대응체계 고도화

### ① 전문 구조·구급 인력 확대 및 전문성 강화

- 구조·구급 전문 인력 충원(360명) 및 기존 경찰관을 구조대원으로 자체양성(20명)하고, 파출소·함정 경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긴급구조과정\* 운영
  - \* 중·소형함정 2명, 파출소(구조거점파출소제외) 6명(2명×3교대)씩 배치
- 구조전문인력을 신입과 기존 직원으로 구분하여 전문교육을 강화하고, 지난해 긴급구조과정 이수자에 대한 맞춤형 보수교육 실시
  - ▶ (신입 구조대원) 임용 前 관서실습기간 활용, 중특단에서 집중 교육(4주)
  - ▶ (기존 구조대원) 구조기술 향상, 잠수감독관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교육 운영
  - ▶ (긴급구조요원) 능력별 맞춤형 교육 및 구조대원과 합동훈련 실시

## ② 해양재난 대비·대응을 위한 매뉴얼 고도화

- 해양사고 또는 해양재난(태풍 등) 발생 시 체계적인 구조본부 운영 및 현장 대응을 위해 관련 매뉴얼 개정 및 가이드라인 제작 추진
  - ▶ 구조본부 운영 요원별 구체적 조치사항과 핵심 조치사항을 수록한 포켓북 제작
  - ▶ 태풍 대응에 적합한 조직 및 대응단계로 구성한 '태풍 대책본부' 신설
  - ▶ 항공기 해상사고 발생 대비 핵심 조치사항 등을 수록한 대응 가이드라인 제작
- 우리청 해상조난사고 통계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「해상조난사고 통계작성 및 관리에 관한 훈령(가칭)」 제정

## ③ 해양구조구난공단(가칭) 설립 추진

- '해양구조구난공단' 조직 운영개념 정립 및 공단 설립근거를 관련 법률에(수상구조법) 마련하고, 공청회 등을 통해 민·관 공감대 형성 추진

---

## ③ 선진 수색구조 협력체계 구축

---

### ① 민간 수색구조 활성화 시스템 마련

- 해양사고 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민·관 협력을 위해 구조협회 중심 민간세력 조직 통합관리 및 구조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
  - ▶ (운영체계 확립) 민간구조세력 통합에 따른 「민간구조대원 운영지침」 개정
  - ▶ (민간역량 강화) 민간대원 자격기준 신설 및 맞춤형 교육·훈련(이수 의무화) 추진
  - ▶ (사기진작 방안) 단체피복 지급, 보험지원, 바다의인상 포상금 신설 등

### ② 수색구조 국제협력 저변 확대

- 해외 선박사고 시 인접국과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색구조 및 상호협력증진을 위해 한-러(본부) 및 중·일 지방 MRCC 간 MOU 체결
  - ※ 중부청-中요녕성, 서해청-中강소성, 제주청-中절강성, 제주청-日10관구
- 중·일·러 등 인접국 및 우리국적 선박 통항량이 많은 미국 등 주요국가간 수색구조 합동(통신 등) 훈련 실시

## ① 수상레저 전담인력 확보 및 현장 안전관리 강화

### ① 수상레저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확보

- 조종면허시험·레저사업장 안전점검 등 대민업무 및 수상레저 현장 안전관리·사고예방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서 수상레저 인력 확보
  - \* 19개 경찰서 중 4개서(인천,부산,통영,목포)를 제외한 15개서 수상레저계 미설치

### ②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

- 민·관 합동 사업장·레저기구 점검·지도 및 주요활동지·사고다발지 예방순찰 강화, 시기별 테마단속 실시, 지자체 내수면 안전관리 지원
  - \* '20년 국가안전대진단(6월) / 여름 성수기, 봄·가을 행락철 테마단속(음주·무면허 등)
- 수상레저 안전 교육·홍보 콘텐츠(영상, 포스터, 물품 등) 기획·추진

## ② 수상레저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·제도 개선

### ① 「수상레저관리법」 제정 등 법 체계 재정비

- 현행 「수상레저안전법」은 면허, 안전관리, 사업, 등록·검사, 보험 등이 일괄 규정되어 있어 기본법과 관리법으로 분법 추진
- 고시 및 실무편람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·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, 국민편의 증진 및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법률 개선 추진
  - ▶ (국민편익) 동력수상레저기구 임시운항허가 제도 신설, 임시검사 사유 추가
  - ▶ (안전강화) 무등록기구 원거리활동 제한, 공기주입형 고정식튜브 안전기준 근거 마련

### ② 차세대 수상레저 정보시스템 구축

- 최신 지능형 정보기술이 적용된 수상레저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
  - \* '20년 '차세대 수상레저 정보시스템' 구축 정보전략계획(ISP) 수행 / 총 39억 원

## ① 선박교통관제법 제정 후속조치 이행

### ① 「선박교통관제법」 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

- 「선박교통관제법」 시행(6.4.) 전까지 법에서 위임한 선박운항자 교육 세부내용 등을 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

### ② 법 시행에 따른 기타 후속조치 이행

- 법령 시행 후 기본·시행계획 수립 등 법정 의무사항 충실히 이행
  - ▶ (기본·시행계획 수립) VTS 기본계획(5년) 및 시행계획(매년) 수립(연구용역 추진)
  - ▶ (전문교육기관 지정) 교육기관 지정기준 부합여부 심사 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
  - ▶ (선박교통관제협회 설립) VTS 관련 연구·사업활동을 위한 관제협회 설립

## ② 선박교통관제 전문화 및 인프라 확충

### ① 해양안전 취약해역 관제인프라 확충

- 목포·군산 및 제주·서귀포에 신규 연안 VTS 구축(20→24개소)하고 영흥수도·울산신항·포항구항 3개소에 레이더 설치
- 부산신항·울산 VTS 노후 레이더의 부식이 심화되어 新 레이더로 교체

### ② 우수한 전문 관제인력 양성

- 교육원 내 VTS 교육훈련센터 구축 및 해양계 교육기관 내 VTS 교육과정 개설 추진 및 채용 조건 등 개선\* 검토

\* 향후 「선박교통관제법」 상 관제사 채용·자격, 교육기관 지정 등 반영 추진

- 관제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실무형 교육·훈련 체계 마련

- ▶ (사례기반 교육) VTS별 사례분석 자료를 현장직무교육 등 교육자료로 활용
- ▶ (상황관제 훈련) 사고 가정 도상훈련(매월), 현장세력 동원 실제훈련(연 4회) 실시
- ▶ (상황처리 강화) 종합상황실과 연계한 VTS 상황처리협업 교육 과정 개설

치안	전략 3 더 정의로운 해양 치안	
	9. 해양에 특화된 전문수사체계 구축	수사

## ① 수사의 독립성 및 책임성 강화

### ① 수사전담 조직 체계로 전환

- 해양경찰 수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수사정보국을 재편하여 수사전담조직인 출범 및 관련 법적 근거 마련(해양경찰법 개정)

- ▶ (본 청) 수사정보국(경무관) → 수사국(치안정감 또는 치안감 案)
- ▶ (지방청) 수사정보과 → 수사과

### ② 해양에 특화된 전문수사역량 및 책임수사 강화

- 객관적 지표로 수사지휘자의 역량을 평가·분석하여 미비점을 스스로 보완해 나갈수 있도록 ‘수사지휘 역량 종합평가제’ 도입·시행

※ 개인 평가결과와 항목별 전국 관서 평균치 비교를 통해 진단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

- 해양 특정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‘전문수사관’ 제도를 활성화

\* 기존 인증자(30명) 현행화, 실질적 인센티브 도입, 인증분야 전문교육과정 확대 운영 등

- 해양경찰에 특화된\* 차세대 첨단 과학기술을 적극 도입한 독자적 ‘형사사법정보시스템(KICS)’ 구축 추진(예산 약 270억원)

\* 선박 등 원격 화상조사, 해양 통합정보 연계, 음성인식 기술,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

### ③ 국외 해양범죄 적극대응을 위한 「형사소송법」 개정 추진

- 국외 대한민국 선박에서 체포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관련 기산 시점을 국내 호송 입국심사 완료 시로 법 개정 추진

\* (현 실태) 국외 및 공해상 발생한 강력범의 경우, 국내 호송과정에 제3국 경유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,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구속기간 확보에 어려움

※ 【現】 ‘체포한 때’ → 【改】 ‘입국심사 완료 시’ / 과거 의원입법 추진 사례 있음(’17.6.)

---

## ② 체계적인 전문수사교육으로 수사역량 고도화

---

### ① 수사연수소를 미래 해양수사교육의 허브로 발전

- '19년 출범된 수사연수소의 정식 직제화 및 우수 교수요원 양성 등 교육 인프라 확대로 독자적 수사전문교육기관의 안정된 기반 마련
  - ▶ ('20년) 非직제 전종인력 3명 운영, '21년 소요정원 요구 → ('21년) 정식 직제화
  - ▶ 수사연수소를 수사전문교육 여건이 우수한 '천안'으로 이전 추진
  - ▶ 경찰청 수사기법 + 해양 특별법 수사 Know-How = 독자적 수사기법 개발

### ② 현장 실무에 최적화된 체계적인 수사전문교육 운영

- 수사경찰 개인 전문성 유지 및 강화를 위해 '표준 교육이력 관리제' 도입
  - ▶ 쏘 수사 관련 교육이력 분석, 시기·대상자·컨텐츠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 제공
  - ▶ 수사부서 기능별·직책별 필수교육 리스트 마련, 교육과 인사 연계
- 현장 실무에서 필요한 맞춤형 수사전문교육 과정 개발 및 최일선 합정·파출소의 수사전담요원 역량 강화를 위한 수사교육 체계화
  - ▶ (수사경력별 교육) 신입(입문·양성) - 전문(심화) - 지휘(간부) 과정으로 체계화
  - ▶ (수사전담요원) 경찰서(분기별) - 지방청(지방학교) - 수사연수소(전문교육) 과정으로 운영
- 송치사건 결과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및 분석 등 환류체계 강화
  - ※ 분기별 송치 후 검찰·법원 처분 불일치 등 분석 및 공유, 수사연수소 교육자료 활용
- 산재된 수사관련 매뉴얼·지침을 통합 정비하여 수사지침을 '단권화' 하고, 본청 차원에서 매년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는 등 통합 관리
  - ※ 휴대폰으로 실시간으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'e-book' 제작

---

## ③ 수사제도 개선을 통한 인권감수성 제고

---

### ① 인권 친화적 수사환경으로 제도 개선

- 변호사 자격 영장심사관을 통한 강제수사 사전통제를 강화하고, 영장신청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인권침해 소지 차단



- ▶ 전국 주요 공통 미발부(기각) 사례 등 분석, 소속기관 공유 및 교육자료 활용
- ▶ 영장신청서 작성 관련, 사건 유형별 필수 확인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제작

- 피의자 인권·방어권 보장을 위해 자신의 답변과 조사 주요내용을 기록, 점검할 수 있는 ‘자기변호노트’ 제도 전면 시행

## ② 유치장 환경 종합 개선 추진

- 유치인 인권보호를 위해 지능형 CCTV 설치 등 인권 친화적 유치장으로 개선하고, 유치장 관리를 전담하는 ‘유치장 관리팀’ 시범 운영

- ▶ (환경개선) 최신 환풍시설 설치, 인권친화적 리모델링 등
- ▶ (관리시스템 혁신) 지능형 CCTV, 유치장관리스테이션 설치
- ▶ (근무체계 변경) 現 경찰서 직접수사 기능에서 함께 수행 → ‘유치장 관리팀’ 신설

---

## ④ 해양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및 전문성 강화

---

### ① 해양 특화 과학수사 조직으로 정비

- 본청 수사과 소속인 과학수사계를 課 단위인 과학수사센터로 재편하고, 5개 지방청 과학수사계장 직급 상향 추진

### ② 해양 과학수사 인력·장비 첨단화

- 과학수사인력의 자체 감식능력 향상 등 전문화를 위해 전문교육, 관련학과 수료, 자격증\* 취득 지원 등 자기능력 계발 강화 추진

\* 폴리그래프자격증, 디지털포렌식 자격증, 스쿠버 초급과정 자격증

- 쏘 지방청 과학수사의 자체능력을 강화하고, 맞춤형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첨단 분석장비\* 도입 및 시스템 고도화 추진

\* 해양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(R&D) / 휴대용 모바일포렌식 분석장비 도입(예정)

- 해양특화분야에 대한 전문가 지식 및 첨단기법을 공유하기 위해 해양과학수사 저널(the scene)을 국제표준 정기간행물로 등재 추진

치안	전략 3 더 정의로운 해양 치안	
	10. 국민 중심의 형사활동 방향 정립	형사

## ① '5大 해양 부조리 근절' 등 형사활동 고도화

### ① 5大 해양 부조리 근절 추진

- 해양에서 발생하는 안전저해, 부정수급, 토착비리, 갑질행위, 채용비리를 5대 부조리로 규정하고, 관계기관 협업 등 강력한 수사 전개

- ▶ (안전저해) 고질적 해양안전 저해사범(선박불법개조, 과적·과승, 음주운항) 및 국민건강을 해치는 불량 먹거리·유해물질 특별 단속  
※ 선박검사기관(KOMSA, KR)과 안전검사 정보공유 및 시기별 특별단속
- ▶ (부정수급)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·불량 석유유통에 대한 수사력 집중 및 국가·지자체 보조금·어업보상금 사업 기획수사 전개  
※ 해수부(보조금 자료공유)-석유관리원(시료분석)-관세청(탈세추적) 공조
- ▶ (토착비리) 지방청 중심 해양 사업비리 기획수사 전개 및 경찰서별 고질적인 싹쓸이 조업 등 연중 불법어업 특별단속 실시  
※ 공조조업, 잠수기조업 등 기업형 불법단속에 집중(해수부 협업추진)
- ▶ (갑질행위) 치안 사각지대 하급선원·장애인·외국 노동자 대상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를 발본색원 할 수 있도록 첩보수집·단속 강화  
※ 외국인 선원(고용부, 해수부), 도서지역 장애인(옹호기관), 실습선원(병무청) 등
- ▶ (채용비리) 관행적 반칙과 특권의 산물인 해·수산계 공공기관 채용비리 대상 지방청 중심 기획수사 강화

### ② 해양 마약수사 강화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

- 해역별 특화된 맞춤형 수사를 위해 지방청에 마약수사대 신설을 추진하고, 외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·운영하는 등 민·관 협조체제 강화

- ▶ (본청) 중대 마약사건 수사, 정책기획 역할 강화 / (지방청) 마약수사대 신설
- ▶ (전문가 자문단) 유관기관, 학계, 의약계 등 전문가 10명 내외로 자문단 구성
- ▶ (협업)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(식약처 산하 NGO) 업무협약 체결 추진
- ▶ (교육) 교육원 '마약수사 전문화 과정' 개설 추진 및 마약수사 매뉴얼 작성·배포

## ② 사회적가치 실현 등 근무혁신을 통한 국민중심 형사활동

### ①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를 위한 형사활동

-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정보공유 및 장애인·외국인 선원 등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단속활동 강화

- ▶ (협업강화) 인권침해행위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
- ▶ (전문교육) 일선 형사 대상 인권유린사례 식별, 의사소통, 보호조치에 관한 교육
- ▶ (특별단속) 지방청별 단속테마 설정, 설문조사 등 첩보수집 및 특별단속

- 고령·소형선박 영세어민 등은 제도 중심 형사 활동을, 경미사범은 심사를 통해 감경 처분하는 ‘경미사범 심사제’ 확대 운영(3→19개署)

- ▶ (지도점검) '20년 경찰서 성과지표 운영 및 현장소통을 통한 개선사항 발굴
- ▶ (규칙제정) 전국 단위 통일성 확보, 공정하고 합리적 운영을 위해 운영규칙 제정

### ② 현업근무체계 내실화 및 형사기동정 근무혁신 추진

- 경찰서 형사계 교대근무 인력 부족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도록 대폭적 인력증원 및 근무 내실화를 위한 규칙 제정 추진

- ▶ (증원추진) 미시행 6개서 현업서 전환, 현업팀별 실질적 인력확보 추진·대응
- ▶ (규칙제정) 근무체계(교대주기·근무시간) 등 복무사항 및 임무 규정, 안정적 운영

- 형사기동정 근무체계를 목적형 해·육상 출동체제로 전환하고, 검거부터 조사·송치까지 직접 수행하도록 수사역량 강화

※ 고질적·기업형 불법어업 단속 전담함정 지정, 수사과와 기획 합동수사 등 역할 확대

치안	전략 3 더 정의로운 해양 치안	
	11. 글로벌 외사활동, 국제성 범죄 효과적 대응	외사

## ① 글로벌 외사경찰 도약을 위한 성장 동력 확대

### ① 국제 공조 네트워크 확대 및 전문성 강화

- 인터폴 등 국외 채널 확대, 관세청 등 관련 기관들과 협조체제 강화
- 국제범죄수사 컨퍼런스 개최(9월) 등 官·學 행사 확대

### ② 밀수·밀입국 등 국제범죄 관련 「해양국경 동맹(Alliance)」 개척

- 국적선사 주요 거점, 국제범죄조직 근거지, 주요 마약 생산지 관련 국가의 치안기관과 범죄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

## ② 해역별 해양국제범죄 수사 및 외사 방첩활동 강화

### ① 4대 해양국제범죄 수사 고도화 ※ ①국경관리 ②국민안전 ③국익보호 ④인권보장

- '4대 해양국제범죄'를 기획수사 중심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연초 권역별(5개 지방청) 집중단속 계획 수립 및 역량 고도화 추진

### ② 국익보호 수사역량 향상을 위한 외사 방첩활동 활성화

- 방첩공유센터 및 포털 운영 개시('20년~)에 따른 방첩기관의 융·복합 정보체제를 통해 국익에 기여하는 외사방첩 활동 전개

## ③ 제도·정책 개선을 통한 외사영역 다변화

### ① 외국인 범죄 적극 대응을 위한 조사권한 확보

-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(5월) 예정, 외국인 동향조사권한 확보 추진

### ② 다국적범죄 효과적인 수사 지원 및 수사의 공정성 제고

- 사법통역인제도 도입 및 경비합정 영상녹화제도 도입 · 실시

치 안	전략 3 더 정의로운 해양 치안	
	12. 스마트 정보·보안 역량 강화	정 보

## ① 4차 산업혁명 시대, 해양정보의 정체성 및 독자성 확립

### ① 해양경찰 정보개념 재정립 및 독자적 영역 확보

- 해양경찰 정보활동의 기능(부서)별 연관성과 확장성을 고려하고, 정보기능 패러다임 및 발전모델 제시로 개념 및 활동근거 정립
- 국가와 국민 중심의 독자적인 해양경찰 정보 활동방향 설정

### ② 『정보 융합운영체계』 구축을 통한 정보 스마트화

- (단기) '해양정보 개념체계' 마련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·기관에서 수집되는 해양정보를 융합해 가공할 수 있는 조직체계로 재설계
- (중·장기) 기능별 독립적으로 운용 중인 데이터 정보를 융합·분석, 정책 판단정보로 재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추진

### ③ 국민안전을 위한 해상집단행동의 사전예방활동과 집중안전관리

- 정부와 국민 간 소통창구로서 해상진출 시 인명사고를 예방하고, 적극적 사전예방활동으로 집단민원 안전 관리

## ② 굳건한 안보환경 조성을 위한 보안 인프라 구축

### ① 대북상황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보안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

- 대북상황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접적해역 보안조직 및 인력 확충
- 대북제재위반 선박 등 북한 관련 정보수집체계 구축·활용 및 UN 대북제재 이행능력 확보를 위한 보안수사교육 확대

### ② 굳건한 해상안보환경 확보를 위한 국내·외 협력체계 강화

- UN대북제재 이행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
- 일본, 중국, 러시아 등 주변국 상대 정보 수집활동 강화

## ① 미래형 방제 조직·제도 기반 강화

### ① 현장대응에 특화된 방제조직으로 설계

- 해양오염 방제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찰서 내 현장 대응조직을 신설하고, 중특단을 사전유출방지 및 화학사고 대응 전문조직으로 특성화
- 정형화된 방제정 운용방식을 목적형 출동제로 전환하고, 다양한 임무수행을 위해 일반직과 경찰관 비율 조정 등 인력운영체계 개선

### ② 다목적 방제정 및 방제비축기지 신설 등 방제자원 확충

- 국가방제 대응능력향상을 위해 방제작업, 화재진압, 유류이적, 비상예인 등 다목적 임무 수행이 가능한 환경친화적 다목적 방제정 도입
- 방제장비·비축물품 등 방제자원 확충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고, 방제업체가 전무한 제주해역의 재난대응 강화를 위해 비축기지 신설

## ② 국내·외 협력 및 전문가 소통 강화

### ① 국제협력 확대 및 공적개발원조(ODA) 사업 추진

- 세계 최고 방제전문가그룹인 ITOPF(런던)를 초청, 방제전문교육을 추진하고, 해양오염 방제 및 예방체계 고도화를 위한 국제협력 확대
- 新남방정책 일환 베트남 방제역량강화를 위한 ODA 지속 추진('15년~)

### ② 국내 해양오염방제 자문그룹 구성 및 전문가 소통 강화

- 전문가 자문기능 강화를 위해 방제기술지원협의회를 전문 자문그룹으로 개편하고, 최신 방제정보 공유를 위한 '방제기술 아카데미' 개최



## ① 해양오염사고 대비·대응체계 고도화

### ① 해양오염사고 대비·대응체계 개선

- 지방청별 광역방제대책협의회를 신설하여 대형 해양오염사고 시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확대·운영

### ② 효율적 현장 방제대응을 위한 협업 및 현장지원 강화

- 방제물자 공동활용을 위한 해경-공단 간 상호 지원체계 마련
- 방제 전문인력 교육·훈련 개선 및 매뉴얼 제작 등 현장 지원 강화

## ② 복합적 해양오염사고 대비·대응역량 강화

### ① HNS 등 특수방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인프라 확충

- 적극적 사전유출방지를 위한 전문교육 강화 및 절차 마련 추진
- HNS 및 긴급구난 민간자문가 자문단 200명 확대 운영 및 민·관 협업 강화를 위해 컨퍼런스, 간담회 등 각종 소통 협의체 운영

## ③ 민·관 협력을 통한 방제역량 강화

### ① 민간 방제세력 확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

- 해양자율방제대 확대운영, 교육·훈련, 경비·재해 보상 등 관련 법·훈령 개정

### ② 해안방제 역량 강화 및 지원 확대

- 지자체 해안방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·훈련, 방제자원 점검 등 지원근거 마련 및 해안방제 전문교육·컨설팅 확대

## ① 국민이 체감하는 해양환경보호활동 전개

### ①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환경보호활동 전개

- ‘해양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’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어업인 등 대상 교육·홍보, 점검·단속 및 수거지원 강화
- 낚시 중 발생하는 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를 스스로 되가져 갈 수 있도록 대국민 대상 ‘깨끗한 환경의 낚시문화 만들기’ 운동 전개

### ② 선박·해양시설 및 항만사업장 발생 대기오염물질 점검 확대

-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(3.5→0.5%) 중점점검 및 해양시설, 하역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 점검

## ② 스마트 감시체계 전환 및 재난안전 점검 강화

### ① 무인·스마트 기반의 예방 관리

- 고정익 드론 등 무인비행기를 활용한 항공예찰을 통해 오염원, 중국 어선 피항지, 낚시어선 밀집지 등에 대한 입체적·과학적 단속 실시
- 선박도면·제원·위반사항 및 관리대상을 실시간으로 조회·입력할 수 있도록 IT 기술(테블릿 PC) 활용 해양오염예방 스마트 지도점검

### ② 해양오염 예방 민간참여 활성화

- 해양오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세·노후 등 취약선박 예방컨설팅 확대
-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‘명예해양환경감시원 운영지침’ (훈령) 제정 및 위촉자에 대한 교육·간담회를 개최, 자원봉사자 리더 양성 확대(30명)

### ③ 대규모 기름저장시설 및 유조선 안전점검 강화

- 국가안전대진단 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시설 중점 안전점검
- 선박·시설 출입검사 투명성 강화 및 내실 있는 지도점검 실시

혁 신	전략 5 더 혁신적인 스마트 해양경찰	
	16. 국민 삶을 향상시키는 혁신성과 창출	기획재정

## ① 모두가 함께하는 국민체감형 혁신 성과 창출

### ① 내외부 협업 활성화 및 국민 정책참여 강화

- (협업 활성화) 정책 이행력 제고를 위한 부서간 협업·조정을 강화하고, 외부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중점협업과제로 추진
  - ▶ 현안실무·정책조정회의(상시), 성과보고회(반기별), 전국지휘관워크숍(1회) 협업
  - ▶ 업무별 협업 MAP 구축 및 협업 활성화 방안 수립 시행
- (해양경찰위원회 운영) 위원회가 실질적인 감독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 대상 주요 추진업무 보고 및 일선현장 방문 추진
  - ▶ 해상치안현장 특성 파악을 위한 함정·파출소·VTS 등 방문
  - ▶ 시기별·테마별(낚시철, 피서철, 불법조업 성수기 등) 지방청 관할 순회 방문

## ② 역점 정책을 탄탄히 뒷받침하고 견인하는 예산·국회 활동 강화

### ①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전략적 예산 확보

- 「미래 발전전략 2030」 실행계획에 기초하여 ‘중기사업계획’을 수립하고, MDA 체계 구축 등 SMART化 예산 증액 추진
  - ▶ ‘20~’24년 중기사업계획에 미래비전 2030 전략과제 우선 반영
  - ▶ 年內 국민 체감형 성과의 창출을 위해 ‘20년 각종 사업 추진계획 조기 시행

### ② 국회업무 전문화 및 협력적 파트너십 강화

- 20대 국회 전반을 분석, 21대 국회 출범 대비 전략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, 국회실무에 관한 교육원 교육과정(기본·전문과정) 개설
- 제21대 국회 출범 시 본청 과장급 이상 및 소속기관 지휘관과 국회의원 간 「책임전담제」를 시행하고, 업무설명회 및 현장방문 조기 실시

혁 신	전략 5 더 혁신적인 스마트 해양경찰	
	17. 지속 성장이 가능한 미래형 조직운영 기틀 확립	혁신행정

## ① 미래 업무환경에 걸맞은 스마트 조직문화 정착

### ① 주요정책에 대한 혁신 이행체계 구축

- 「미래비전 2030 - 주요업무계획」 등과 연계하여 조직 내 혁신 (정부혁신, 적극행정 등) 실행력 강화

#### 〈'20년 정부혁신 역점과제〉

- ① 국민 참여 대폭 확대 ② 선제적·맞춤형 서비스 ③ 디지털 기술활용 서비스 개선  
④ 공정행정 확립 ⑤ 디지털 기반 업무효율화 ⑥ 단순·반복업무 자동화(RPA)

- 현장직원 혁신 우수제안 및 기관별 모범성과 창출사례 적극 발굴·포상
  - ▶ '20년 정부혁신·적극행정 실행계획 계획 및 혁신 파이어니어 활성화 계획 등 시행
  - ▶ 혁신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우수사례 발굴·포상(필요시 협업, 조직문화 등 포함)

### ② 열정과 변화를 일으키는 조직문화 도입

- 新 조직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조직관리 유형별 개선방안 마련 및 일하는 원칙, 해양경찰 현장 개정 등 적극 추진
- 활성화 방안 마련, 우수사례 공유·확산 제도화 등 적극행동 유도
  - ▶ ①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시 현장 우수사례 소개(매월) ② 이달의 빛과 소금(매월) ③ 혁신성과 공유(年2회) ④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·포상(반기1회)

## ② 성과관리체계 정착으로 자기주도적 근무환경 조성

### ① 新 성과평가제도 내재화로 주요정책 성과창출 견인

- 통합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성과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기적 성과점검·보완, 성과관리 우수사례 전파 등 성과문화 정착
  - ▶ 통합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·운영
  - ▶ 新 성과체계 내재화를 위한 권역별 현장점검(함정·파출소 등)

### ② 국민만족도 자체 조사를 통한 성과환류 활성화

- 우리 청 정책 관련 접촉고객을 대상으로 상시적인 정책만족도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서비스 품질 향상
  - ▶ 「모바일 전수조사 시스템」 구축·운영(6월~) 및 전문분석관 채용
  - ▶ 향후 국민만족도 조사센터 설치를 위한 인력·예산 확보 추진

혁 신	전략 5 더 혁신적인 스마트 해양경찰	
	18. 미래변화에 걸맞은 인사운영체계 개선	인 사

## ① 미래를 선도하는 해양경찰 인재 관리체계 구축

### ①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체계 도입 및 인사법령 정비

- 해양경찰의 미래업무 환경에 맞는 종합적 인사관리를 위해 전략적 인적자원관리(S-HRM) 운영체계 도입 추진

\* 「인력충원 - 교육훈련 - 인사운영 - 평가보상」 등 종합적 인사관리 체계 마련

▶ S-HRM 구축을 위한 추진 로드맵 마련(정책연구용역 진행)

- 우리청 경찰공무원의 임용·승진 인사정책의 독자성을 강화하기 위해 現 경찰청 중심 법령체계를 해양경찰만의 독자적 체계로 구축

▶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(개정), 同 시행규칙(제정)

### ② 유능한 인재 채용 및 균형인사 실현

- 업무 경쟁력을 갖춘 중간관리 계층 확보를 위해 간부후보생 선발 인원을 확대하고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인력\* 적극 충원

\* 우리 청 업무분야와 관련된 전문성 검증체계 별도 마련

▶ 간부후보생 충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('20년 20명)

▶ 5급 공채(행시)·정책소통·항공·작전·구조 등 분야별 전문인력 확보

- 조직 내 균형인사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여성경찰관 비중 및 장애인 채용 확대 지속 추진

▶ 여성 경찰관 목표충원률 관리 : ('19) 12.6% → ('20) 13.2% 이상

▶ 경감 이상 여성관리자 목표 충원률 관리 : ('19) 2.3% → ('20) 2.4% 이상

▶ 장애인 공무원·근로자의 고용률 관리 : ('19) 3.51% → ('20) 4.1% 이상

---

## ② 현장 중심의 유연한 인사운영

---

### ① 인사권한 위임으로 지방청 중심의 인사제도 정착

- 지방청별 자체실정에 맞는 인사운영규칙 제정 등 지방청 중심의 원소속제도 정착(지방청 간 발령 축소, 교류인사 개선)
  - 지방청 인사담당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전담인력 추가 배치 및 ‘지방청 인사계’ 직제 신설 추진
- ※ <권한위임에 대한 관리·감독제도> 본청 주관 인사감사·지도점검 활성화, 소속기관 포상 추천자 공적 검증 강화

▶ 지방청 인사관리 방안 마련 및 지방청 인사담당 증원

### ② 전문직위(전문관) 신설 및 확대 추진

- (경찰관) 전문성과 장기근무 필요성이 높은 경우\*, 전문직위 신설
- \* <例> 구조·항공·경비작전·상황처리 등
- (일반직) 기존 본청 위주의 전문직위를 소속기관으로 확대하여 지정

▶ 경찰관 전문직위 관련 법령 개정 및 일반직 전문직위 소속기관별 신규 발굴

---

## ③ 인사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인사운영시스템 구축

---

### ① 인사발령시스템 구축 및 기존 운영시스템과 통합

- 「인력 적재적소 배치-인사고충 처리-근무평정·승진심사」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인사운영시스템 구축 추진

▶ 인사운영시스템 계획수립(3월) → 의견수렴·시범운영(4~10월) → 완료(11월)

### ② 전자근무평정 확대 시행 및 시스템 고도화

- 전자근무평정 시스템을 전 관서(본청 포함 29개 기관)로 확대하고 성과평가 연계 등 기능 개선 추진

혁 신	전략 5 더 혁신적인 스마트 해양경찰	
	19.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체계 고도화	교 육

## ① 「2020 교육훈련 혁신 원년」 선포

- ① 교육 분야의 정적인 특성을 탈피해 ①혁신 동력 확보 ②제도·체제 리뉴얼 ③교육훈련체계 고도화의 방향으로 적극적 혁신 추진

- ▶ (혁신동력) ①교육정책협의회 발족 ②자기주도 학습환경 조성 ③교육 법령 제정
- ▶ (리 뉴 엘) ①체력검정 제도 개편 ②사격훈련 대상 확대 ③제2교육 분원 운영
- ▶ (체계고도화) ①신임교육 개편 ②인적인프라 강화 ③훈련체계 고도화

- ② ‘교육-훈련’ 정책 연계 및 미래형 훈련체제로 전환을 위한 종합 훈련팀을 신설·운영하여 훈련 정책 전반에 걸쳐 개선 검토

- ▶ ① 기능별 현장 훈련 연계·복합 훈련 실시 ② 중복, 불필요 훈련 조정·개선
- ③ 훈련실시 결과 관리 ④ 현장 훈련 집행 및 평가방식 개선 등

## ② 국민 공감 채용 제도 선진화로 우수인재 선발

- ① 역대 최대규모의 인력 충원(1,609명)에 따라,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수험생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채용정보 홍보 추진 강화

- ▶ 채용 서포터즈 운영, 채용 알리미 서비스 제공, 채용정보 콘텐츠 제작·배포 등

- ② 채용 공정성 확보를 위해 주관적 판단 요소를 배제하고 객관적인 개인역량 평가체계 전환, 채용기준 정비 및 법적근거\* 마련

\* 年內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최소 유예기간(1년) 부여 후 2022년 시행 목표

- ▶ 체력검정제도 개선, 수사특임경과 경력채용 필기시험 도입, 전문역량 검증체계 마련



혁 신	전략 5 더 혁신적인 스마트 해양경찰	
	20.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해양경찰 스마트화 실현	스마트추진단

## ① 『미래 발전전략 2030』 실현을 위한 스마트 해양경찰 본격 추진

### ① 6大 미래핵심기술 중심의 스마트 해양경찰 추진전략 수립

- 타 부처 성과, 민간기술, 해외사례 등 조사, 국별 스마트 전략사업 발굴
- 6大 기술을 접목한 해양경찰 스마트 추진전략(기술로드맵) 수립
- ▶ 「비전2030」 이행을 위한 R&D사업 투자전략 및 관련 산업 육성대책 마련

### ② 스마트 전략사업에 따른 연구개발(R&D) 추진

- 부처-기술 융합R&D 정부투자 확대에 따라 다부처사업\* 적극 추진
- \* 양적(사업규모) · 질적(기술) 동시 성장 및 예산확보 용이성 등 감안하여 중점 추진
- 6大 기술 중심의 기존 · 신규과제 예산 반영으로 속도감 있는 R&D 추진

기 존	신 규
(빅데이터) 해상교통정보('19~'23), 연안위험도('20~'23) (무인체) 중형무인항공기('19~'22) (웨어러블) 구조대원 스마트장비('20~'22) 등	(무인체) 인공위성, 무인선박 (IoT) 스마트 정비창 (ICT) 수색구조 장비 등

### ③ 전문성 및 실행력 확보를 위한 운영체제 개선

- R&D 방향설정, 첨단기술 도입 등 전문가 자문을 위한 자문기구 운영
- ▶ 자문기구 구성 : 스마트 기획위원회(외부 전문가) + 스마트 워킹그룹(본청 기획부서) 위촉
- 「비전2030」 실행력 확보를 위해 부서별 '스마트 실행과제(정책 · 기술분야)'를 선정, 부서별 MBO과제로 관리

- ▶ 매년 주요정책별 중장기 계획, 법정 기본계획 수립 시, 미래전략 실행계획과 연동

## ② 광역 MDA 체계 구축을 위해 ‘인공위성 도입’ 사업화 추진

### ① MDA 구축 필수 플랫폼인 인공위성 사업화 첫 착수

- 인공위성 사업 사전기획연구('20.7월) 및 예타추진 등 단계별 인공위성 사업 전략\*을 추진

\* <1단계(통신위성)> 자체 위성 탑재체 개발 → <2단계(초소형위성)> 지능형 재난관측 감시기술 확보 → <3단계(소형위성)> 광역해역 실시간 영상정보 획득

- ▶ 예타사업 : 통신위성(예타 본심의 '20.2월~), 소형위성(예타접수·기술평가 '20.5월~)
- ▶ 非예타사업 : 초소형위성(다부처사업, 예산심의 '20.5월~)

### ② 위성기반 선박 모니터링 및 분포예측 기술 개발

- 기존 위성을 활용한 해양데이터를 수집·분석하여, 선박 탐지 및 분류, 분포를 예측하는 선박 모니터링 및 상황공유체계 개발

- ▶ 위성연계 접경수역 선박 모니터링 및 분포 예측 체계 개발('20~'23년 / 총 55억원)

## ③ 첨단기술 활용 집중적 장비개발로 현장 대응역량 강화

### ① 퀵체인지(Quick-Change) 방식을 적용한 임무장비 신속 개발

- 현장 요구사항 반영, 상용제품을 개선(개조)하여 신속 보급체계 마련

\* 스마트추진단 정식 직제화('21.7월)를 위해 성과목표 중심의 업무(정량+정성) 추진

- ▶ 중국어선 홍포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단속장비 개발·보급(현안사항)
- ▶ 현장 아이디어 관련 장비를 즉시 제작할 수 있는 오션팩토리(공작소) 운영

### ② 해양경찰 장비 실용화 강화를 위한 리빙랩 플랫폼 구축

- 현장직원(최종수요자)이 장비개발 기획, 개발과정 및 시제품 실증에 참여하여 실용화(제품화)를 촉진하는 리빙랩 체계 마련

- ▶ 자체 또는 R&D로 개발된 모든 장비는 리빙랩 플랫폼을 적용, 현장 실용성 검증

혁 신	전략 5 더 혁신적인 스마트 해양경찰	
	21.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리더로 도약	국제협력

## ① 양자협력·다자협약 등 국제협력 교류범위 전략적 확대

- ① 대륙별 거점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호주(오세아니아), 나이지리아(아프리카), 프랑스(유럽) 등과 신규 협력관계 체결 추진
  - 단순 외연적 국제협력 네트워크 범위 확대가 아닌 국제 의제 정책 반영률 제고 등 국제협력 실제협업률 향상(65 → 67%) 추진
- ② 각종 다자협약에 대한 우리청 참여를 확대하고 '21년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제22차 NPCGF의 차질 없는 준비

▶ HACGAM(아시아해양치안기관장회의) 대표단장급 격상·참가자확대, ACGF(북극해양치안기관포럼)에 옵저버 참여 지속 추진, CGGS(세계해양치안기관회의) 참여

- 국제기구 파견\* 등 국제정보 수집을 통해 국제테러·해적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정보 활용역량 제고(국제정세리포트 활용)

\* UNODC(유엔마약범죄사무소), RECAAP ISC(아시아해적퇴치협정 해적정보센터), IMB-PRC(국제해사국 해적신고센터)

## ② 신남방 정책 본격 추진 및 국제전문가 지원 체계 정립

- ① 퇴역함정 양여 등 무상 원조사업(ODA)을 본격 추진하고 수출입은행 자금을 활용하여 국내 중소조선업체 건조함정 수출사업 지원
  - ▶ 인니「해양치안교육훈련센터」구축, 국가별·다국가 글로벌 연수 추진
  - ▶ 외국 해양치안기관 경비함정 수주를 위한 코트라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
- ② 맞춤형 국제법 교육을 통한 현장 대응력 강화

▶ 상황대처에 필요지식을 일선 직원 중심으로 교육 실시(게시판, 공유 순회교육 실시)

혁 신	전략 5 더 혁신적인 스마트 해양경찰	
	22. 해양안전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대국민 홍보	대 변 인

## ① 국민이 공감하는 기획홍보 강화

- ① 해양경찰의 주요 정책을 국민이 일상에서 쉽게 접하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략적 홍보 추진

- ▶ '해양경찰 주요 정책' 인지도 향상을 위한 기획홍보 전략 수립
- ▶ 문화소통 프로젝트 확대(국민 공모전을 통한 시·소설·노래·사진 등 문화 콘텐츠 발굴·확산)

- ②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어린이·청소년 대상 체험시설을 확대하고 외부기관 협업,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범국민 캠페인 추진

## ② 공감형 언론 및 디지털 소통을 통해 해양경찰 긍정 이미지 제고

- ① 디지털 쌍방향 소통 활성화를 위해 유튜브 채널 등을 활용하여 해양경찰 고유의 방송 콘텐츠 제작·송출

- ▶ 콘텐츠 발굴 : 현장미담사례, 신임순경 현장 적응기, 해양경찰 '체험 삶의 현장' 등
- ▶ 해양경찰 활동 360° 입체 영상 제작, 인기 유튜버 협업 홍보 등 새로운 시도

혁 신	전략 5 더 혁신적인 스마트 해양경찰	
	23. 근본적 변화를 통한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도약	감 사

## ① 기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전략적 대응

① 민원인(외부), 소속직원(내부), 관련전문가(정책고객)가 느끼는 청렴도 취약분야를 집중 개선하여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 추진

- 청렴도 향상 대책을 마련하여 기관장·부서장 중심으로 책임감 있게 이행하고, 빅데이터 기반 감사·감찰 종합정보시스템 도입 추진

- ▶ 청렴도 향상을 위한 「2020년 청렴 프로젝트」 추진(기관장의 역할 강화)  
※ ▲ 청렴환경 조성 ▲ 취약분야 개선 ▲ 청렴교육확대 ▲ 인센티브 강화
- ▶ 현장부서 청렴순회교육 확대 및 청렴교육 콘텐츠 발굴·캠페인 활성화

## ②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감사 운영

① 감사첩보, 언론보도, 국정감사 이슈 등을 종합 분석하여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, 테마형 집중감사 추진

- ▶ 주요정책의 성공적 뒷받침을 위한 정책감사 실시
- ▶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컨설팅 감사 활성화 및 관련 전문가 확보 추진

② 감사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감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사·감찰관 대상 맞춤형 교육프로그램\* 운영(외부교육기관 협의)

\* 초급과정(우리청) → 중급과정(감사교육원 등) → 고급과정(감사교육원 등)

- ▶ 감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감사자문위원 위촉\*  
\* 7명 이내(임기 2년) / 감사계획 수립·처분 등 자체감사 관련 검토 및 자문

③ 감사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이행관리 전담자를 지정, 감사처분 이행을 관리·감독하는 ‘감사처분 이행관리 책임제’ 실시

혁 신	전략 5 더 혁신적인 스마트 해양경찰	
	24. 출근길이 즐겁고 자긍심 넘치는 일터환경 조성	운영지원

## 1 일할 맛 나는 근무환경 마련

① 외상후스트레스(PTSD) 장애 직원의 치료를 위한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현장 교대근무자에 대한 건강관리 강화

- ▶ 마음돌봄프로그램 상시 운영(동료상담사 양성) 및 통합건강관리시스템 구축 추진
- ▶ 야간교대근무자(6,500여명) 대상 특수건강검진 항목 확대(11 → 13개 항목)

② 공안직과 동등한 수준으로 기본급여 인상을 추진하고 순직자의 명예를 높일 수 있도록 예우 강화

- ▶ 기본급 인상 및 특수업무수당 간 병급 지급을 위한 규정 개정
- ▶ 지방청별 추모시설(Memorial Hall) 조성 및 해양경찰 추모 주간 운영

③ 일-가정 양립문화 정착을 위한 연가 권장, 초과근무시간 단축을 지속 추진하고 의무경찰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복무환경 조성

- ▶ 권장연가일수 확대(16→17일), 초과근무시간 단축(月 34.6→31.1h)
- ▶ 모범의경 특전 확대, 복무규율위반자 엄단, 피해신고 채널 확대 등

## 2 국민에게 다가가는 민원행정·업무지원

① 민원행정 관련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모바일 민원응대 시스템을 도입하고 외부 빅데이터 분석시스템과 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

- ▶ 카카오톡 內 해양경찰청 알림톡 개설·대국민 홍보
- ▶ 민원처리사례를 네이버(지식인) 제공, 민원정보분석시스템(권익위) 연계 활용

② 해양경찰의 역사·비전을 국민에게 알리고,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역사기록 박물관 건립 추진(복합문화공간·특수기록관 기능)

③ 혁신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현장 수요를 발굴·확산시키고 혁신지향 계약방식(경쟁적 대화방식 계약, R&D 사업 조달연계 등) 적극 활용